

# 겉에는 ‘made in 코리아’, 속으론 ‘made by 인텔칩·MS’

## 흔들리는 IT코리아

### ⑥ 노트북

글로벌 시장서 점유율 높지 않아  
차별성 둘 곳은 외관·짜임새·가격차  
앱·클라우드·콘텐츠 등 전략 필요



왼쪽부터 삼성노트북9, LG그램, 애플 맥북프로2018.

/삼성전자·LG전자·애플 홈페이지

매년 봄 가을 신학기가 되면 특별히 구입을 염두에 두는 대표적 IT제품으로 ‘노트북’이 있다. 학생과 직장인에게 노트북은 필수도구에 가깝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노트북 제품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

2016년 12월 미국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는 15~16인치 노트북 PC 평가에서 삼성전자의 15인치 노트북9을 77점으로 1위로 올렸다. 이 제품은 애플 맥북 프로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가 됐다. 올해 5월 30일 컨슈머리포트는 LG전자 2018년형 올뉴그램 15.6인치 모델에 노트북 제품 평가에서 가장 높은 84점을 매기며 1위로 평가했다. 역시 2위는 맥북 프로였다.

이후 LG전자는 올해 7월에 LG 그램

13, 14, 15 모델이 모두 컨슈머리포트 노트북 순위 1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막상 국내 노트북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지 않다.

트렌드포스가 발표한 지난 1분기 노트북 출하량에 따르면 1위는 HP로 24.1%, 2위 DELL은 16.6%다. 5위는 애플로 7.7%다. 국내 주요 PC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한 나머지 회사들의 점유율은 2016년 13.8%, 2017년 13.2%, 2018년 10.8%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제품 자체가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삼성전자 측은 “수년 전부터 해외 PC 시장에서는 폭넓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LG전자 관계자는 “해외 시장 진입한 기간이 짧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

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국 노트북의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다.

“한국 노트북 제품이 적당한 만들새로 높은 평가를 얻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안쪽을 살펴보세요. 핵심 연산을 책임지는 CPU는 인텔이 만든 로드맵을 그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인텔칩을 쓰지 않는 순간 거의 모든 사용자가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없이는 어떤 구매도 끌어내지 못해요.”

업계전문가는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지적했다.

“맥북은 아이폰과 비슷하게 아예 다른 시장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핵심부품을 바꾸거나 값을 올린다고 해도 쉽게 사용자들이 떠나지 못해요. 하지만 나머지 노

트북 제품은 다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만든 고급 제품인데, 대만이나 중국에서 만든 중저가 제품인데 사용자들은 CPU와 운영체제를 가장 먼저 봅니다. 결국 차별성은 외관과 부품 짜임새나 가격차이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뒤떨어지면 사용자는 언제든 다른 제품으로 옮겨갈 수 있죠.”

현재 한국 노트북이 주된 경쟁력으로 삼는 부분은 가벼운 무게와 긴 배터리 유지시간이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LG화학에서 나오는 소재 기술과 배터리 성능을 원천경쟁력으로 가진 점을 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 SSD,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부품을 내부에서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경쟁사보다 가격 설정 등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이런 부품은 독점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며 사용

자의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해석이다.

물론 이런 구조에 부정적 면만 있는 건 아니다. 작년 8월 22일 포브스는 애플이 신형 맥북 시리즈에 인텔 8세대 CPU가 탑재되지 못한 점을 들어 “프리미엄 노트북의 수요층을 대거 놓칠 수도 있는 위기”라고 보도했다. 완벽주의를 토대로 오랜 설계와 기획기간을 거쳐야 하는 애플에 비해 삼성전자는 인텔의 발표가 나온 직후 하반기 PC 주력상품 노트북9에 최신 CPU를 탑재한 라인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최신기술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 노트북이 완벽하게 프리미엄 제품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2012년 미국 잡지 PC월드 “애플의 성공을 모방하려는 기술 기업들은 앱, 클라우드, 콘텐츠, 기기 등 4개의 영역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고안했다. 애플의 경쟁사들은 이런 마법 같은 공식을 최근에는 발견했으며 지금에서야 자신들만의 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노트북이 과연 이런 공식을 얼마나 달성했는가 하는 부분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양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 지난해 축산물·자동차 분야 ‘리콜’ 늘었다

### 공정위 ‘2017년 리콜 현황’ 발표 자동차 업계 자진 리콜로 건수 ↑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가 교환·환급하는 ‘리콜’이 작년 축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리콜 현황’을 19일 발표했다. 작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1404건으로, 전년보다 199건(12.4%) 줄었다.

리콜 건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 약제에 대한 대규모 리콜 명령(561건)을 내린 2014년 1752건으로 크게 증가하고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작년 리콜 유형을 보면 리콜 명령이

701건(49.9%)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 리콜 529건(37.7%), 리콜 권고 174건(12.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자진 리콜은 2015년 536건, 2016년 556건 등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결함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한약제 포함) 100건, 축산물 96건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축산물과 자동차는 리콜이 늘었지만, 의약품과 식품은 감소했다.

일반 공산품은 세정제나 코팅제 등 리콜이 다소 증가했지만 제품안전기본법

상 안전성 조사 관련 리콜 조치 건수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6.1% 줄었다.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등으로 업계의 자진 리콜이 늘면서 전년보다 리콜 건수가 18.6% 늘었다.

식품은 첨가물 기준 위반 건수가 줄면서 전년보다 32.1% 감소했다. 의약품도 41.2% 줄었다.

축산물은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 명령이 크게 늘어서 전체 건수는 74.5% 증가했다.

리콜 근거 법률을 보면 리콜을 규정한 16개 법률 가운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2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관리법(18.7%), 식품위생법(15.2%), 소비자기본법(12.5%) 순이었다.

공정위는 작년 리콜과 관련한 개선 사항으로 정보 제공과 피해 구제 신청

이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애플리케이션 ‘행복드림’) 개선을 꼽았다.

이를 통해 리콜 정보 제공 분야를 식품·공산품뿐 아니라 화장품·의약품·자동차 등 9개 품목으로 넓혔다.

아울러 작년 10월에는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복드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통합 리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품목별 리콜정보는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도 위해 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소관 부처에 적극 신고해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영 기자 grandtrust@

## 부동산 자전거래 방지 위한 허위계약 신고방지 법안 발의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자전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전거래는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9일 시장 거래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허위계약 신고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동향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계약해지를 신고하지 않아 집값 담합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투기세력을 잡고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기, 서영교, 김병기, 김정우, 정준숙, 주미애, 금대섭, 남임순, 김영호 등 이상 9인이 공동발의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국민 교육비 부담 줄이고 입시중심 교육 탈피할 것”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소신 밝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할 경우 국민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입시중심 교육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교육은 여전히 입시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은) 과도한 성적 경쟁을 하고 있다”며 “소득과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가 될 수 있다는 국민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 후보자는 “국가의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추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와 함께 미래에 대비한 인재양성 시스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새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역 사회 발전의 거점인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학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명문대 진학을 교육의 목표로 두는 풍토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성·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령기 이후에도 취업·이직·육아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꾸려 인재양성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이밖에 사회부총리로서의 부처 간 협력·조정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의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